

文 대통령 지지도 50% 근접 한국당도 33% 기록 '최고치'

文 지지율, 1.7%p 오른 49.1%...민주당도 2.1%p 오른 40.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주 만에 40% 대를 회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해 현 정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차(4월 29~30일, 5월 2~3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49.1%(매우 잘함 24.2%, 잘함 24.9%)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지율은 2월 4주차 조사(49.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내린 46.0%(매우 잘못함 32.0%, 잘못함

49.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4.9%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6일 46.8%로 마감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따른 여야의 고소 고발전이 이어진 29일에는 47.3%, 삼성 전자 사업장 방문 등 경제 행보가 있었던 30일에는 48.2%로 높아졌다. 지지율은 한국당이 집단 사발 등을 통해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 이날 2일(50.5%)과 3일(50.0%)에는 50%를 넘기도 했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광주·전라(62.2%→69.1%, 부정평가 25.9%) ▲서울(48.0%→60.3%, 부정평가 43.6%) ▲경기·인천(49.8%→51.8%, 부정평가 43.9%) ▲부산·울산·경남(40.9%→42.4%, 부정평가 54.5%) ▲30대(52.5%→61.1%, 부정평가 34.0%) ▲60대 이상(33.7%→35.4%, 부정평가 58.6%) ▲중도층(43.3%→50.8%, 부정평가 45.3%)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38.2%→34.3%, 부정평가 59.5%) ▲대전·세종·충청(45.4%→43.7%, 부정평가 50.2%) ▲진보층(77.7%→75.4%, 부정평가 21.1%)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오른 40.1%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2월 3주차(40.4%) 조사 이후 10주 만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0.0%→57.1%) ▲대전·세종·충청(34.2%→38.3%) ▲경기·인천(40.5%→43.1%) ▲서울(37.5%→39.0%) ▲60대 이상(25.1%→28.4%) ▲50대(33.2%→36.3%) ▲30대(44.8%→47.0%) ▲40대(49.0%→60.4%) ▲중도층(33.7%→41.4%) ▲진보층(63.0%→64.2%)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한국당은 1.5%포인트 오른 33.0%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지지율은 현 정부 집권 후 주간집계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대구·경북(41.5%→51.4%) ▲부산·울산·경남(33.4%→38.5%) ▲경기·인천(27.9%→30.1%) ▲40대(20.7%→26.0%) ▲30대(21.2%→24.0%) ▲중도층(27.2%→34.8%) ▲보수층(63.0%→65.9%) 등에서 약진했다.

반면 정의당(7.8→6.2%), 바른미래당(5.3→6.2%), 민주평화당(2.7→2.3%)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여의도 사발史...의원직 사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위한 사발을 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대출, 윤영석, 이상우, 김태홍, 성일종 의원, 이상수 천안병 병협위원장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위한 사발을 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대출, 윤영석, 이상우, 김태홍, 성일종 의원, 이상수 천안병 병협위원장

여야 4당에 비해 수적 열세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홀로 고립되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 당 내에서 의원들은 사발 뿐만 아니라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대야 투쟁의 결기를 다지고 있다.

박대출 김태홍 성일종, 윤영석, 성일종 이상우 의원 등으로 이어진 사발 투쟁을 두고 ‘사발 정치’, ‘사발 정국’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았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처럼 ‘구석기 시대 투쟁 방법’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주장했지만 친북 성향이 강한 정채과 급진적인 성격의 당령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 투쟁 동력을 많이 끌어올리진 못했다.

반면 신행정수도 관련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충청권 의원들의 사발 투쟁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2010년 1월 당시 자유선진당 류근찬, 이상민, 김낙성, 임영호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은 사발로 여당·정부를 압박, 결국 여론에 힘입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2007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이근현, 신상진, 김충환 의원의 사

론 아동·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에 사발을 시도했다가 주변의 민투로 머리를 짚게 자른 바 있다.

대야 공세가 필요한 시점이면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치는 전략도 자유한국당의 투쟁 전술 중 하나다. 근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잇따라 등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실행시 의원직 총사퇴를 고려하겠다고 임포를 놓은 바 있다.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으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정국이 한때 긴장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4월 마지막 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다시 거론됐다. 박인숙 의원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한다. (의원회관) 방배는 수준의 사퇴를 해야 한다”고 제안해 결기를 보였다.

이에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그다 큰 호응을 얻진 못했다. 의원직 총사퇴의 실효성을 떠나 총선 정국에서 지지성이 떨어지는 ‘공갈포’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렸기 때문이다.

의원 본인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강행할 수 있는 사발 투쟁에 비해 의원직 사퇴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회기 중에 사직을 원할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돼있다. 의원의 ‘사표’는 국회의 의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한다. 각종 비리나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률로는 절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오세정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서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이 의결로 처리됐다.

한국당의 전신에서 가장 최근에 의원직을 사퇴한 건 강용석 변호사다. 18대 국회에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을 폭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사발·의원직 사퇴 제안하며 강경 투쟁 결의 정치인 사발, 투쟁 독려·지지층 결집 '1석2조' 효과 의원직 자진사퇴 사례는 드물어...국회 표결도 필요 가장 최근 사퇴는 오세정...강용석은 대국민 사과도

사발 투쟁은 주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사발은 몸을 바쳐 싸우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내년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의원들의 사발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국회원들의 사발 투쟁은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적인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효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3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신동, 김재연, 오병은,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정부의 정당예산 심판 청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체 사발을 한 바 있다. 통진당의원들은 정당해산 시도를 위협적이고 불법적 행위로 전면 무효라고

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한 사발도 당시 열린우리당이 요구를 수용해 합의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목표를 이뤘다.

199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나주 시장 공천현금 의혹에 연루됐던 정호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정치적 모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발 투쟁을 벌였지만 16대 공천에서 탈락했다. 2011년 당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전주)에 LH공사 분산 배치를 촉구하는 사발을 했지만 무산됐다.

이밖에 2004년 당시 설훈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발을 했고, 2011년 9월에는 민주당 최종연 의원이 태백시 생존권 수호 관련 불만 탓에 사발한 적 있다.

여성 의원의 ‘준사발’도 있었다. 2010년 빈곤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빈

박지원 “北 발사체, 정부가 사실대로 발표해야”

“현혹은 오히려 혼란 조성해”

북한이 쏘아 올린 단거리 발사체 명칭에 대해 탄도미사일, 전술유도 무기 등 여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이란 미사일이야 발표해야 한다. 단거리 발사체 혹은 전술유도무기라면 또한 그렇게 발표해야 한다”며 “숨기다가 혹은 가짜뉴스 생산하다 정

부건 아들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방이면 폭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발사 후 주장에 대해 한·미 군사 및 정보 당국의 합동 조사발표를 보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도 한·미 공조로 조사 분석한다니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정부가 거짓말한다”, “청와대가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현혹은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

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민약 문제인 정권이 가져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그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